

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피해 여배우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강제 추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성 영화인들이 여성단체와 함께 피해 여배우를 돕고 나서면서 영화계 내 권력관계와 성평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처음으로 총제작비 10억원 이상이거나 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인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성 인지 통계를 집계했다. 그 결과 2017년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7편으로 전체의 8.4%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개봉한 영화 여성 배우가 주연한 작품의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여성 제작자가 참여한 상업영화는 연평균 16.2편(22.2%), 여성 작가가 참여한 상업영화는 22편(30.1%)이었다. 여성 촬영감독이 촬영한 영화는 연평균 2.4편(3.29%)에 그쳤다.

영화 '브이아이피'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 묘사로 여성혐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영진위는 "남성들이 집단으로 주연을 맡는 영화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여성 혐오적 콘텐츠를 비판 없이 수용한다면 시장도 점차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기존 관객을 붙잡아 둘 동력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재개봉 열풍 주춤

최근 몇 년간 불었던 재개봉 영화 열풍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2017년 재개봉한 영화는 87편으로 2016년 90편보다 줄었다. 재개봉 영화의 평균 관객 수는 1만865명으로, 2016년도 평균 1만4천976명에서 27.4% 감소했다.

전체 재개봉 편수는 줄었지만, 한국영화 재개봉은 2016년도 6편에서 2017년 11편으로 늘었다. 최근 거의 제작되지 않는 한국 멜로영화의 수요를 '클래식'(2003), '번지점프를 하다'(2001) 등 2000년대 멜로영화들이 기획전 형식으로 채웠다. 1960년대 개방적인 '박서방'은 고전영화 상영관 한 곳에서 상영돼 1천 600여 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외국영화를 포함해도 멜로물이 강세였다. '이프 온리'(2004)가 15만9천627명을 동원하며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4만936명으로 3위를 기록한 '원스'(2007), 4위 '첫키스만 50번째'(2004) 등 멜로영화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 종교

## ■ 개요

종교인 과세가 2017년 종교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특히 보수 개신교계가 정부의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종교계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으로 촉발된 대형교회 세습 문제는 개신교를 넘어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조계종에서는 적폐청산을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했다.

종교인구 감소가 종교계의 고민거리가 된 가운데 종교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소득을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종교인 소득 과세의 법적 근거는 2015년 마련됐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보수 개신교계에서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결국,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범위도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구분해 기록·관리하면 그 부분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도 주도록 했다.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자 정부는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내역을 반드시 담당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수 개신교계와 불교계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여전히 종교인에 대한 특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했던 보수 개신교계와 불교계에 비해 천주교는 시종일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느긋한 자세를 유지했다. 천주교는 1983년 납세 논의를 시작해 이미 1994년부터 개별 신부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 ■ 명성교회로 불붙은 대형교회 부자세습 논란

명성교회 부자세습 절차가 2017년 11월 마무리되면서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개신교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을 한 뒤 교회 측은 세간의 세습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청빙위원회를 꾸렸고,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3월 명성교회는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하기로 결의했다.

김 목사가 2014년 분립 개척한 경기도 하남 새나래명성교회의 합병안도 통과시켰다. 10월에는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동남노회에서도 청빙안이 통과됐다. 결국 김하나 목사는 11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했다.

명성교회 세습은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의 세습방지법에 어긋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습에 반대하는 교단 내 세력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습 반대 운동은 예정통합 소속 목회자와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 명성교회 내 일부 교인 등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성명서 발표와 시위 등이 이어졌다.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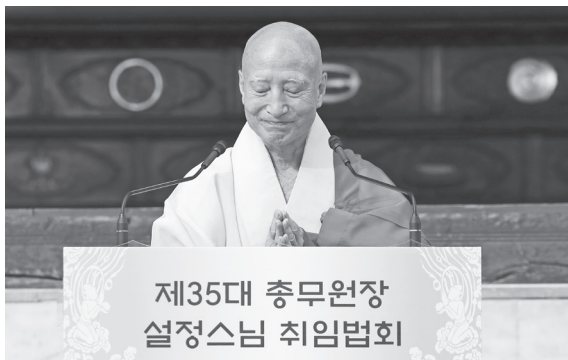
## ■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체제 출범

2017년 10월 열린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수덕사 방장을 지낸 설정 스님이 당선됐다. 설정 스님(234표)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자였던 수불 스님(82표)보다 3배 가까이 표를 거뒀다. 간선제인 총무원장 선거에는 중앙총회의원 8명,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240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선거 과정 내내 비방과 폭로전이 난무했다. 설정 스님 측은 수불 스님이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있다며 물고 늘어졌다. 수불 스님 측은 설정 스님에게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설정 스님 측은 은처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선거를 앞두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7월부터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를 열고 자승 체제 퇴진과 종단 쇄신을 압박했다. 종단에서 제적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이 집회에 합류해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

설정 스님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종단을 정치 집단화하고 타락시킨 근본 원인으로 선거제도를 꼽으면서 임기 내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제재)를 받은 승려의 복권 등을 포함한 대탕평 조치도 시행해 종단의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11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취임 법회에서 당선된 설정 스님이 취임사를 하기 전 합장하고 있다.

## ■ 종교인구, 전체 인구 절반 미만으로 감소

신자 감소 추세가 종교계의 걱정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 인구 비율이 5년 전보다 줄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23%)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종교인구 비율은 46.6%로 5년 전(55.1%)보다 8.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20대 중 종교인구 비율은 30.7%로 평균보다 15.9%포인트나 낮았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의 비율은 20.3%로 5년 전보다 2.2%포인트 낮아졌고, 불교인의 비율은 19.6%, 천주교인의 비율은 6.4%로 각각 2.5%포인트, 3.7%포인트 하락했다.

종교인구 중 현재 교회나 사찰, 성당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개신교인 중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은 2012년 전체의 10.5%에서 2017년 23.3%로 증가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일예배를 대신한 적이 있다는 이들이 51.2%로 5년 전(16%)보다 크게 늘어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교를 가졌다가 무교로 전환한 이들(257명)은 그 이유로 '신앙심이 생기지 않는다'(3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엄매이기 싫어서'(21.0%), '종교 지도자에게 실망해서'(20.6%) 등을 들었다.

성직자가 되려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종교계의 걱정거리 중 하나다. 조계종의 경우 출가자와 불교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일 년에 두 차례 출가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스님이 대중포교에 적극 나서도록 장려하는 '전법사(傳法師)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51세 이상 65세 이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 출가 프로그램도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 ■ 천주교 평신도 희년 선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를 '평신도 희년(禧年)'으로 선포했다. 평신도 희년이 선포된 것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이다.

희년은 가톨릭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한다.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과 비정기적으로 선포되는 특별 희년이 있다. 교황청은 희년 기간 전대사를 부여해 고해 성사 이후에도 남아있는 잠벌을 모두 면제해 준다.

한국에서만 희년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가 교회 차원에서 평신도들이 희년을 지낼 수 있도록 건의해 희년이 선포된 것은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천주교 측의 설명이다.

2018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희년 기간 전·월세를 올리지 않거나 줄여주는 운동,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어린이를 위한 원격입양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 ■ 개신교계 연합기구 분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 개신교계가 아쉽게 연합기구 통합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연합기구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신교 교단장 협의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8월 한국기독교연합(가칭)으로 통합하겠다고 선언하고 창립 총회를 열었다. 당시 두 단체는 정식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제회 총회를 통해 대표회장 인을 추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후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정관 등을 놓고 두 단체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통합이 무산됐다.

한국교회연합은 이후 법인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 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회는 12월 중 한국기독교연합 제회 총회를 열고 정식법인으로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한국교회연합이 이 이름을 선점함에 따라 한국교회총연합회 측은 '한국교회총연합'으로 이름을 바꿔 제회 총회를 열었다.

한교총 측은 주요 대형교단의 참여로 한국교회의 95%가량이 한교총에 동참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교총 출범으로 개신교 연합기구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이 교계 내에서 제기됐다.

## ■ 시민단체에서 터져나온 종교개혁·적폐청산 목소리

불교, 개신교, 천주교 관련 단체들이 원효 탄신 1400주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공동 선언문을 12월 발표했다.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와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주류 종교의 관련 지식인들과 5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개혁선언 추진위원회는 “대다수 대중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종교는 따듯이 안아주지도, 길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며 성직자와 수행자들의 타락은 이미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종교 개혁을 천명했다.

현역 종교인이 아닌 국내 주류 종교 관련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종교개혁 활동에 나선 것은 종교가 스스로 개혁할 역량을 잃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 문화재

## ■ 개요

역사책을 바꿔 써야 할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인지를 두고 격론이 펼쳐진 '증도가자' 논란이 일단락됐다. 문화재청은 증도가자 소장자가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신청 심의를 부결했다.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었다.

또 소장자와 일부 서지학자의 주장대로 '남명천화상승증도가'를 찍은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다만 문화재청은 이 활자가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이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도 허용됐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생태제방 축조안이 다시 부상했으나 문화재위원회

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문화재청이 2015년 환수한 덕종어보가 1924년에 다시 제작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 파장이 일었다.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광화문 헌판의 색상을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다. 경주 월성에서는 제물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동궁에서는 8세기 수세식 화장실 유적이 나와 화제를 모았고, 경산에서는 압록국 왕릉급 무덤이 발견됐다.

해외 문화재 여러 점을 환수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실패했고,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도 무산됐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모두 세계기록유산이 됐다.

## ■ “출처 불분명한 증도가자, 보물 가치 없어”…7년 논란 일단락

2010년 9월 다보성고미술이 공개한 뒤 문화재계의 해묵은 쟁점이 된 '증도가자(證道歌字)'가 보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7년 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문화재청은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도가자를 조사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組版·판에 활자를 맞춰서 짜넣는 작업)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서도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인지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증도가자의 소유자인 김종춘 다보성고미술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김 대표는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위원회가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신청을 부결한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장이라면 일단 지정을 보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승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한 활자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위한 현상변경, 진통 끝에 허가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71호 설악산 천연보